

민주 “한국당 개정안은 유치원 비리 조장법”

교육위 ‘유치원 3법’ 개정안 심사…회계 투명성 놓고 격돌 여 “학부모 부담금 사적 사용 규제 없어” vs 야 “자율권 쥐야”

여야는 3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법안심사 소위는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통과 시 집단폐원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정부는 ‘폐원 시 경쟁 대응’이라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유치원 3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에 중계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 쟁점은 정부에서 주

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육비 회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및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이었다.

최대 쟁점인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 할 것을, 한국당이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며 맞섰다.

한국당 박상도 의원은 “사립학교교과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사유재산임을 전제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

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 목적 교비의 사적 용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지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관계없는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한국당 안은 결국 ‘사립유치원 비리방지법’이 아닌 ‘유치원 비리 조장법’”이라며 “(한국당 안은)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게 돼 있는데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목적의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정부가 주는 보조금, 지원금은 정부가 감사·통제하게 하고, 학부모가 내는 비용에 대해서 운영상 최소한의 자율을 갖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재원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고 (법 개정에서) 현실 적합성을 높여서 유치원 (폐원)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회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의 핵심쟁점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12월9일까지) 내에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사립유치원 70%가 가입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지난달 27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집단 폐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놔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폐원을 하거나 모집을 미루는 유치원에 대해 행정지도와 감사를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현행법상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운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수 2野 또 ‘조국 흔들기’

한국당, 靑 기강문란 경질론…민주 “사안과 무관”

여야는 3일 최근 연이은 청와대 내 기강문란 사건과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를 놓고 대립했다.

보수 야당은 이날도 ‘조국 흔들기’를 계속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감싸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귀국 후 어떻게 할지 한국당이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 민정수석 경질론을 또 다시 제기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경질부터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조 수석을 감싸고 나섰다. 이혜찬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문책, 경질을 요구하는데

저는 그것이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며 “사안의 크기만큼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연이은 구두논쟁 등을 통해 적폐청산과 공직기강 확립은 확고해야 하며 사법개혁에 있어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임을 수차례 강조했다”며 그간의 논쟁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전날 발표된 당의 입장과 달리 이날 페이스북에 “조 수석의 사퇴를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만약 그(조국 수석)가 물러난다면 (사법개혁은) 도로아미타불로 원점 회귀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사법개혁 특유의 개혁은 물 건너 간다”고 사퇴 반대 이유를 밝혔다.

“광주-순천 전철화 예산 국비 반영을”

광주시·전남도의회 국회 앞 회견…대통령 결단 촉구

광주시·전남도의회는 3일 경전선 호남 구간(광주-순천)의 전철화 사업 예산을 국비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 이경호 운영위원장,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 서동욱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국비 반영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촉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으로, 노선 중 영남 지역은 복선 전철화 사업이 이미 완공되거나 진행 중이지만, 호남 구간은 일체 강점기 이후 단 한 번도 개량되지 않았다”며 “호남 낙후의 상징이며, 영·호남 차별의 대표 사례로 지적돼왔다”고 밝혔다. 이어 “4년 9개월이나 끌어진 예비타당성조사가 0.85라는 높은 B/C

(benefit/cost)에도 불구하고 0.01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명백한 지역 차별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광주-순천 구간의 경전선 고속화 사업이 실현되면 모든 구간이 시속 200km 이상 고속운행이 가능해지면서 영·호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토 균형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며 “정부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45억 원을 즉각 내던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경전선은 광주송정역에서 밀양 삼랑진역까지 이어지는 이음 그대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3일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임시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동형비례제 수용하라” 야 3당 오늘부터 농성

바른미래·평화당·정의당, 대통령 긴급회동 요청키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연대 행동을 펼쳐온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4일부터 국회 본관 로터너룸에서 정기국회 내 선거제 개혁 합의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간다.

앞서 평화당은 3일 오전부터 국회 본관 계단 앞에 당 상징 색인 연두색 비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야3당의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4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로터너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집회를 한 뒤 곧바로 선거제 개혁 합의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인 5일 또는 6일에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 간에 긴급 회동을 열 것을 지속해서 요청하기로 했으며, 5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으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이날 오후 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안에 예산 심사를 마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이 그토록 원하는 정치개혁 1호 명령인 선거제 개편을 수행해야 한다는 책무도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선거제 개편을 꼭 이뤄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사표(死票)가 많은 불합리한 제도로 21대 국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오늘 이런 공조가 이뤄졌다. 예산안 못지않게 선거제 역시 국민과 민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며 “거대 양당은 당장의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확인해 줘야 한다”며 “정치개혁의 요체는 선거제 개혁으로 이를 거역하거나 비틀려 하는 정치세력은 국민에게 분명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경호·경비 애로 ‘보류’ 가닥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이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정국 상황이 집무실 이전보다는 경제·민생 챙기기에 집중할 때인데다 공간 확보 및 경호·경비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3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자문그룹 인사들은 이번 주말까지만 청와대 측 인사들과 회의를 갖고 집무실 이전 여부를 놓고 의견을 나눈다.

자문그룹 논의 결과 공약대로 집무실을 옮기자는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청와대 집무실을 두고 광화문에 별도의 작은 집무실을 마련하거나 이전 시기를 조정하는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김영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영악화 편의점 폐점시 위약금 감경

당정 자율규약 마련

당정은 3일 경영이 악화한 편의점의 폐점을 쉽게 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낼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의 편의점 자율규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면제해주거나 감경해주는 방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에 신중하게 하기 위해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지자체별 상권 특성 등을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가맹본부는 창업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